

광주·전남 지방선거 최대 화두는 '교육과 일자리'

중앙선관위 '우리동네 공약지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가 "정책·공약 대신, 민주당 공천만 따내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사랑이 오히려 지역의 미래가 담긴 정책을 찾고, 이를 실천할 후보를 뽑아야 할 '폴뿌리 민주당' 축제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이슈를 간추린 '우리동네 공약지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일부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가 정해지는 등 각 당의 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별

이슈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제라도 지역민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우리동네 공약지도'에 따르면 이번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교육과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동네 공약지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국섭 교수팀이 광역단체 17곳, 기초단체 244곳의 최근 4년간 지방의회 회의록 10만여 건, 지자체 관련 언론정보도 630만여 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희망공약 2100여 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지방의회와 연

빅데이터 분석 지역별 이슈 광주, 무등산·청소년·중국 전남, 전남대·교육 키워드 후보자들 맞춤형 공약 촉구

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됐던 키워드를 집대성한 결과이기에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굴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의 최대 이슈를 담은 키워드는 '무등산' '청소년' ' 시내버스' '중국' '일자리' '장애인' '교육' '자동차' '국비' '혁신도시' 순이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따라 '무등산'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커졌고, 정상 부근의 군부대 이전 문제 등도 '무등산'과 함께 거론된 관련어로 집계됐다. 지질명소 무등산을 활용,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지역민의 관심사였다.

2위를 차지한 '청소년' 키워드의 연관어는 '중·고등학교' '교육' 등이었고, '시내버스'의 연관어는 '노선개편' '준공영제' '차고지' '도시철도' 등이었다. 지역민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버스운전사들의 열악한 차고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컸다.

또 '중국'의 연관어로는 '조이자동차'

'전기차' 등이었고 이는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자동차 유치와 이 과정에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조이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많았다. 이 같은 연관어 패턴은 최대 이슈 키워드 8위인 '자동차'에서도 되풀이됐다.

전남은 '전남대학교' '경찰' '교육' '조류독감' '청소년' '안전' '소방서' '혁신도시' '중국' '전남대병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지역 또한 '전남대학교' '교육' '청소년' 등의 키워드를 통해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고, 농촌지역이 많은 탓에 '조류독감' '안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 '소방서'에 대한 관심도 컸다. 1위를 기록한 '전남대학교'의 연관어는 '순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포대'

'여수캠핑스' 등이었다.

특히 광주와 동일하게 '중국'이 높은 순위의 키워드로 집계됐지만 전남의 경우 '중국'의 연관어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관광객' '여행사' 등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관련 관심이 컸고, 중국 관광에 대한 기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민은 '혁신도시'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보였다. '혁신도시'의 연관어로 광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본사' '에너지밸리' '채용' '합동체육실명회' 등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전남은 '정주여권' '클러스터' '아파트' 등 빛가람혁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공광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꾀함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 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산된 6월 개헌...시기·권력구조 이전에 발목

국회 정쟁에 골든 타임 놓쳐 여야 협상 재개도 기약 없어

여권이 추진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24일 사실상 무산된 것은 여야가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이미 예견됐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제는 개헌 논의 재개 여부가 관건이지만,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야당과 2020년 총선까지는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려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4월 들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빚어진 여야 갈등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와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증폭되면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4월 국회가 사실상 개헌의 '골든 타임'

이었지만 이 문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그러나 애초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근본 원인이었고, 이런 맥락에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는 시각도 있다.

우선,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이 일찌감치 6월 이후 개헌을 못 박으면서 개헌 시기를 놓고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다. 또 6월 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의 정치적 유효성을 달리 보는 각 당의 셈법도 개헌 논의를 더욱 어렵게 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지방선거장의 거취와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증폭되면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4월 국회가 사실상 개헌의 '골든 타임'

놓고 여야 입장차는 너무 컸다. 야당에서는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제 또는 추천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내각제라며 반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세웠다.

이처럼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됐지만 개헌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다. 각 정당이 자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한 것도 향후 논의의 재개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처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한 개헌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여야가 '대타협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개헌안 불발, 이승만 정권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투표 무산'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정부) 개헌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록보존소 등에 따르면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3건의 개헌안이 발의됐으며, 1987년까지 9번의 개헌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회와 아닌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

거나 수정 가결됐고 2건은 부결되거나 발의 철회로 폐기됐다. 나머지 1건은 이번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와중인 1951년 11월30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5월14일 부결된 것과 동일한 취지의 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은 야당이 발의한 개헌안과 절충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1954년 1월23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금지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유신헌법)을 발의해 비상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29일 대통령 간선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 원안대로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26일 대통령 권한 분산과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이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헌정특위 마비...선거구제 개편·지방분권 강화 '울스톱'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멈춰서게 됐다. 또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한 개헌 역시 미뤄지게 됐다.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안이나 개헌시기를 두고 대치만 거듭하다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나 국민의 삶에 직결된 지방분권 강화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6월 개헌 무산으로 헌정특위가 마비되면서 이 논의 역시 더는 진전되지 어려운 상황이다.

헌정특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른바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개헌이 무산된다면 선거구제 개편 논의 역시 동력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장기간 미뤄질 경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 상당 부분 진전됐었다.

특히 최근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고, 한국당 역시 다른 야당과 공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열어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도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공항 출발

일본 기타큐슈, 마츠모토(나가노) 직항 전세기

2018년 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무안 ↔ 일본 기타큐슈 직항 전세기

5월 가정의 달 고객 감사 세일
소중한 사람들과 떠나는 가까운 일본 여행

2018년 5월 13일(일)부터 정기편 운항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큐슈 품격 특가 3박4일
단, 3회(5/1(화), 5/8(화), 5/15(화))

한정 특가 599,000원~
(기타큐슈 특급 2박, 고급 온천료칸 1박)

한정 특가 499,000원~
(기타큐슈 1급 1박, 펜션 2박)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2018년 5월 18일(금)부터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품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칸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 / 금요일 출발 **998,000원**

[품격] 나가노, 나가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칸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설악 기간: 4/15~6/22)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 연봉 무로토까지의 대자연의 케이블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으로 이동하는 왕복 산악 루트를 탈것으로 이동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며 5시간 산책 하는 코스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가입(여행비용: 1인당,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수 이용료, 유류비, 유류비, 공항 및 선박, 전액, 전액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 필수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법,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